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8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최수진 · 신성범
배준영 · 김재섭 · 엄태영
박덕흠 · 한지아 · 김상훈
서일준 · 박정훈 · 이종욱
조은희 · 박수민 · 진종오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,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,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살인,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,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

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“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”를 “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----- ----- -----.